피지컬AI-J밸리 추진단 가동

전주시, 사업 추진 위해 전담조직 신설…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전주시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추진 중인 '피지컬AI-J밸리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피지컬AI-J밸리 추진단'을 본격 가동했다.

시는 피지컬AI-J밸리 조성을 위한 기획부터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을 총괄하게 될 전담 조직인 '피지컬AI-J밸리 추진단'을 신설·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일 출범한 추진단은 'J밸리기획팀'과 '조성팀'으로 구성돼 전주를 대한민국 피지컬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피지컬AI'는 로봇·제조·자율주행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제조 혁신과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대학교 등과 함께 피지컬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기술검증) 사업에 참여해 피지컬AI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조성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나아가 피지컬AI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전주 대변혁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피지컬AI 실증을 넘어 연구·실증 인프라와 기업, 인재가 집적된 30만 평 이상 규모의 혁신 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앵커 기업과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피지컬AI-J밸리'를 구상 중이다.

시는 앞으로 추진단을 중심으로 피지컬AI-J밸리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실증 인프라 구축 △피지컬AI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가예산사업 기획 및 발굴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피지컬AI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5급 상당의 외부 전문 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되는 전문 인력은 피지컬AI 분야 앵커기업 유치 전략 수립, 피지컬AI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중앙부처 및 기업 대외협력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향후 피지컬AI-J밸리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전주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이 '2026 연두순방'에서 나온 시민들의 건의 사항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것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올 연두순방' 행동의 소통행정 추진

우범기 전주시장, 후속 조치로 풍남동 등 3개동 현장 방문

우범기 전주시장이 '2026 연두순방'에서 나온 시민들의 건의 사항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것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우범기 시장은 16일 △풍남동 풍남문3길 도로 △효자4동 용호근린공원과 데시앙 아이린 아파트 후문 도로 △삼천3동 모과마을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우 시장이 전주시 35개 동을 돌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2026 연두순방'의 후속 조치로, 시민들의 건의 사항으로 제기된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먼저 우 시장은 풍남문3길 도로 일방통행 구간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이 자리에서 일방통행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상인들의 건의 내용을 현장에서 면밀하게 살폈다.

우 시장은 풍남문·남부시장·한옥마을 간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건의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우 시장은 효자4동으로 자리를 옮겨 저류지 용도변경 및 해당 부지에 연꽃과 창포 식재를 요청한 용호근린공원 현장을 둘러봤다.

우 시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법적으로 명시된 저류지 용도변경 대신, 저류지 인근 부지에 초화류 식재 등 환경정비를 대체 추진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우 시장은 차량의 통행이 불편한 해당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데시앙 우미린 아파트 후문 도로를 찾아 주민 건의 사항을 검토했다.

우 시장은 도로 폭 확장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 및 주민 협의 등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주민 의견을 사전 청취하는 한편, 일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CCTV 설치 등의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우 시장은 삼천3동 모과마을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문제를 살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해당 마을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당 부서에 상수도관 교체 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상반기 중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키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연두순방을 이어가면서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된다"면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행동으로 보답하는 현장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기자

전주시정연구원, 소상공 AX 활성화 방안 제시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전주시 소상공인의 AX(인공지능 변환) 활성화 지원방안을 담은 'JJRI 이슈브리프 제17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JJRI 이슈브리프 제17호'는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들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소상공인 AX 활성화 지원방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디지털 전환을 넘어선 인공지능 변환의 개념이 대두돼 전 산업에 걸쳐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작년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61번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을 통해 소상공인의 DX 및 AX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요한 과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바 있다.

국회도 '중기·소상공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 제정을 논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AX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호남·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제 변화상'에 따르면 전주시에는 8만8,997개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주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입지한 소상공인 중 90.9%가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16일 센터 회의실에서 덕진지역자활센터 등 6개 유관 기관·단체와 함께 '주거 취약 가구 발굴 및 주거 서비스 지원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민 주거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지역 7개 기관·단체와 협약

주거 취약가구 발굴·시민 주거 안정 그물망 구축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를 비롯한 전주지역 7개 기관·단체가 주거 취약 가구 발굴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촘촘한 그물망을 구축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16일 센터 회의실에서 덕진지역자활센터 등 6개 유관 기관·단체와 함께 '주거 취약 가구 발굴 및 주거 서비스 지원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거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더욱 촘촘한 주거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참여 기관·단체는 △덕진지역자활센터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양재노인종합센터 △전주효자시니어클럽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전주공업고등학교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등 7곳이다.

이들 7개 기관·단체는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자활 참여 가구와 장애인 가구, 노인가구 등 총 80가구를 대상으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주거 실태조사와 연계해 주거환경과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실태조사에 따라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데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AI 전환 고품질 SW 개발 테스팅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 이하 진흥원)은 전북지역 ICT·SW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촉진하고, AI 기반 고품질 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6년 AI 전환(AX) 고품질 SW 개발 컨설팅 및 테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순한 품질 개선을 넘어, 요구사항 분석과 개발, 테스트, 운영 등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AX 전략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개발 생산성과 품질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AI 중심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전북 디지털품질역량센터를 중심으로 기업별 AI 활용 수준과 개발 환경을 진단하고, 단계별 AX 실행 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무 지원과 AI 개발 도구 최적화 지원 등 개발 산출물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기업의 개발 효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진흥원은 AI 기반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LLM(대규모언어모델) 기반 에이전트와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 반복 테스트 업무를 효율화하고, 정적·동적 분석을 연계한 품질 점검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보안 취약점과 코드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진흥원은 인공지능 기본법과 EU AI Act 등 국내외 규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와 컨설팅도 지원한다.

GS(Good Software) 인증과 VSE·ISO 42001 등 품질·프로세스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공공시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끝으로 테스팅 지원 분야에서는 기능 적합성과 성능, 보안성, 사용성 등 주요 품질 항목에 대한 종합 테스트와 결함 리포트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본사를 둔 ICT·SW 기업이며, 올 연말까지 상시 접수로 운영된다.

/권희성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